

다산포럼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아직도 통일’과 ‘그래도 통일’ 사이에서

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조사하였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이 조사에서 통일 지지도가 최저치(52.9%)로 나타났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나타난 통일 지지도 52.7%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통일 지지도에 세대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73.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밀레니얼세대에서는 46.5%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은 전쟁세대에서 45.1%인데 비해, 밀레니얼세대는 26.1%에 그쳤다. 젊은 세대 일수록 ‘전쟁위협 해소’를 가장 중요한 통일의 이유로 선택했다.

위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9.7%로, 평화협상이 전개되던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그 원인으로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능력 고도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기 어렵다는 응답으로 이어졌다. 대북 제재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 수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15.4%에 불과해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은 2017년 최고치(54.9%)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46.5%로 가장 낮았다.

국제정세의 악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저하로 단계적으로 통일 환경은 양호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아랍 전쟁과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는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 남북이 규칙에 기반한 국

제질서 재편 흐름에 편승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반도 일대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 문화는 물론 정치, 군사, 정보 분야에 걸쳐 전개되면서 남북대화 전망을 제약할 수 있다. 제반 대내외 정세가 통일 환경에 유리하지 않다. 다만 북한이 통일을 민족을 부정하고 대결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대선 결과와 미중관계를 내다보면 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악화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올리려면 국민들의 통일 여론 속에 숨어있는 정책 대안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균형적인 대북정책이다. 위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은 북한의 적대국 두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 대안으로 ‘대화 재개 및 협력관계 회복’에 31.9%, ‘압박을 통한 북한 내부 변화 유도’ 29.8%, ‘한미일 협력 강화’ 35%의 응답을 보였다. 대화와 압박, 남북 채널과 국제 채널의 균형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수단에 쏠리는 집단은 효과는 없고 부작용이 크다. 두 번째 시사점은 통일 담론의 재구성이다. 세대 간에 통일에 대한 관심은 물론 통일 비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융합하는 대안적 통일 담론을 기대하는 것이다. 마침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안할 것이라고 한다.

미래 세대의 고민과 세계적 시대정신을 고려한다면 통일 담론이 민족, 국가, 이념에 갇혀있을 수는 없다. 전쟁, 인권 침해, 불평등, 기후 위기 등 인류 미래를 위협하는 복합 위기를 극복할 보편가치들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통일 담론이 대안이다. 아직도 통일인가 하는 청산주의적 태도와 그래도 통일이라는 고정관념은 지양할 바이다. 그리고 문을 닫아진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면 평화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청춘 특특



최성학 호남대 드림라이프대학 1년

다시 꿈꾸는 시간, 인생 2막의 아름다운 도전

시작하세요.” 오랜 공무원 생활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내 마음 한 켠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꿈들로 허기졌다. 운동, 문학, 예술, 그 모든 것이 나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했다. 퇴직 후에는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새로운 것들이 버킷리스트에 담겨 있었다. 특히 스포츠를 사랑하는 나에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마침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필라테스를 해보고 싶었다. 무더운 여름, 처음으로 배운 필라테스는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여 평생 사용하지 않았던 신체의 곳곳을 탐험하는 과정이었다. 몸을 굽히고 펴는 여러 동작을 통해 몸의 다양한 사용법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수축과 이완에 놀랐다. ‘탐험할 곳이 지구보다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수상스키의 짜릿함, 그림 공부, 처음으로 배워본 골프, 가드닝 등 새로운 도전들은 내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행복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2학기에는 또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된다.

많은 사람들은 생존과 생계를 위해 살아간다. 퇴직

을 앞두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나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한다면 멋진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릴 적 꿈꾸은 못다한 꿈을 실현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호남대학교 드림라이프 대학에는 ‘트랙’이라는 학제적, 융합적 개념이 있다. 우리는 문화와 스포츠, 예술과 정치, 경제와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나 그 안에서 멀티태스킹을 하면서도 몰입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학창 시절에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우리들, 대학 졸업 후 더 나은 삶의 행복을 찾는 성인 학습자들이 많다. 유명한 셰프가 되지 못해도 좋다. 자신만의 요리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지 못해도 괜찮다. 즐거운 스포츠를 통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이제 나는 드림라이프 대학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인생 2막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 속에서 얻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나처럼 늦게나마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만학도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사도광산과 독립기념관장,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

이 회장은 김 관장이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됐다’는 주장을 폈다고도 밝혔다. 이 회장은 “친일이 반민족이 아니다”라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를 합법화하고 독립운동을 헛수고·헛발질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독립운동 세력을 약화·분열시키고 민족혼을 빼는 일제강점기 밀정 같은 일”이라고 분노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역사 관련 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인사로 잇따라 채워왔다. 지난 7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친일 식민사관 논란을 일으킨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고, 이태용 국가교육위원장(2022년 9월 취임)과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2022년 12월 취임)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펴는 뉴라이트 단체의 주역들이다.

지난 1월 취임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 인식을 젊은 세대에 강요해선 안된다”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2024년 5월 취임)과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2024년 7월 선임)도 각각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과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정부의 역사·교육 연구 주관 단체 수장이 속속 뉴라이트로 넘어가는 일련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뉴라이트 인사로의 퇴행은 이명박 정부 때 8·15를 건국절로 바꾸려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피우기에 나섰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윤 정부의 대일 외교는 국익과 국민 자존감을 저버린 채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앞장서서 털어주는 자해 외교이자 굴종 외교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역사기관 수장마저 모두 뉴라이트로 채우고 있다. 우리 민족의 혼과 미래를 팔아먹겠다는 것인가!

앞서 ‘더 디플로매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에 대한 남한 역사를 없애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열렬한 반공주의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진 ‘뉴라이트(신우익)’ 인물들로 그의 행정부를 채웠다”면서 “이는 모두 남한 엘리트의 식민지 공모와 독립 이후 정부 통제의 연대기를 모호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오늘날 북한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일본 지역당과의 일방적 협력을 지지하는 남한의 보수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역사를 잘라내고 조정하는 것은 인류의 집단적 기억에 대한 엄청난 잘못”이라면서 “사도의 금은 순수했는지 모르지만 그 역사에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좋은 것을 기억하려면 나쁜 것도 기억해야 한다. 기억 상실과 부정은 역사적 기념물에 자리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을 꼬집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뇌리에 맴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모래가 광복절이다.

社說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비율 높여야

우수 인재들의 의대 진학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역 수험생의 70%는 지역의 대를 졸업한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종로학원이 최근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17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인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 필수인력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분을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하는 근거가 될만하다.

설문조사를 보면 비수도권 학생들의 63.4%는 자신들이 속한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에 선호한다고 답해 수도권 의대를 선호한다는 응답(34.4%)의 2배에 가까웠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 학생들은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활동을 하길 원하는 지역으로 68.3%가 지방권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수도권 학생들은 지역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92.9%(63.8%가 서울권, 29.1%가 경인권)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겠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지역인재들의 지역 정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 속 깊어가는 해수욕장 상인들의 한숨

휴가철을 맞아 전남지역 해수욕장을 찾아야 할 피서객들이 바닷가가 아닌 워터파크나 계곡 등으로 몰리면서 해수욕장 인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지역 해수욕장 58곳을 찾은 이용객 수는 지난 8일까지 41만6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만7517명에 비해 2.5% 감소했다. 지역 대표 해수욕장인 신안 대평해수욕장의 경우 2022년 3만3246명이 찾은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2023년 5174명이 찾으며 이

용객이 84.4% 급감한 데 이어 올해 이용객은 2592명(7월 19일~8월 8일)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무안군 망운면 뜰머리 해수욕장 역시 올해 방문객이 전년보다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유달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발길이 줄고 있는 이유로 역대급 폭염이 꼽히고 있다. 극한 폭염에 해수욕은 커녕 야외 활동 자체를 포기하면서 해수욕장

능성을 엿보게 한다.

현재 지역 대학들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은 전남대 79.8%, 조선대 66.7%, 전북대 64.9%, 원광대 68%로 70% 안팎인데 이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 필수인력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분을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하는 근거가 될만하다.

인재가 몰리는 의대와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는 것은 인재 유출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로스쿨에도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해 호남권 로스쿨의 경우 15%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역 인재들이 자신이 자란 곳에서 전문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됐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이용객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욕장 인근 자영업자들은 꼭 차던 평상도 텅 비어있고 수요가 많아 대어해 주지 못했던 튜브가 남아올 정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물 건너간 피서객 특수에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고물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 특수마져 사라질 상황이어서 상인들이 체감하는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여름철 피서객기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계곡이나 워터파크 등지에는 피서객이 몰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지역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줄어든 것을 날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참에 피서객의 패턴과 투수 등이 냉정하게 분석해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단일한 대처가 원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휴가철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지역 해수욕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업체, 도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면법은 정부조직법(1948년 7월)에 이어 제정·시행된 대한민국 '2호' 법률이다. 법률 제정 이유에 '조국의 광복과 정부 수립에 맞추어 현재 각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2만명의 죄수를 사면함으로써 조국광복의 기쁨을 같이 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담겼다.

사면은 형집행정지, 형선고 효력 상실, 복권 등으로 사법부가 내린 형량을 대통령 이 고치는 것인 만큼 그 때마다 법치주의 훼손, 사법 정의와 공정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특히 정치권 인

사면의 정치학

사들이 포함되는 사면·복권의 경우 더 그랬다.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찬성 측과 대통령 의의적 법 운용,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면이라는 반박이 때번 맞았다. 정치적 후폭풍도 크다. 전두환·노태우 사면의 경우 '더 이상의 정치적 보복이나 지역적 대립을 없애야 한다는 내 영원을 담은 상징적 조치'(김대중 자서전)였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같은 진심에도 전씨는 끝까지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고 사방했다. 잘못을 누우치

지도 없는데 성급하게 죄를 면해 줬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별사면과 복권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고유권한임에도, 폭넓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 최서원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사면한 김태우 국민회의 소속 전 서울강서구정장(광복절 특사), 판결 2개월 만에 사면시킨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신년 특사) 등의 사례까지 덧붙여지면 윤 대통령은 그토록 내세웠던 공정은 멀어졌고 상징과도 동등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면 명분으로 '국민회합'이나 오지 않을 리 없다. 그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계산'을 모를 국민도 없다.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기고



최정훈 전남도의회 의원

“일본 기시다 정부는 일본의 역사를 세태하는데 완벽한 공범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찾았다.”

외교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매트'가 지난 7일 '일본 사도섬 금광, 한국 지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Japan's Sado Island Gold Mines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With South Korea's Backing)'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한 내용이다.

더 디플로매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성과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식민지 잔혹 행위와 엘리트의 협력을 은폐하는 한국의 '뉴라이트(신우익)'를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는 8일 '뉴라이트 성향' 김형석 대한민국 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신임 김형석 관장은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당연적 후보 심사위원인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전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우석 | 편집인 최재호 | 편집장 김희철 | 제작국장 김희철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리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